

우수인력 확보에 헛다리 짚는 軍... 현실성·유연성 목소리

딱딱한 군인사법 근본 문제 지적
현·예비역 연계복무, 역종 전환 등
우수 인력활용 유연한 사고 필요

최근 한 언론사가 미래전 핵심인 드론과 로봇을 담당하는 장교들이 조기 전역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에도 밀려 떠날리듯이 전역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현·예비역 군간부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딱딱한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軍, 우수인재 잡으려면 군인사법 등 개정 시급

14일 메트로 경제신문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한 예비역 장교는 “현역복무의 정년을 정한 군인사법 제8조와 진급선 받기준을 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군간부더라도 안정감 있는 복무 토대가 없다면 군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제8조는 하사부터 대장까지 군간부의 현역복무 가능 나이에 제한을 명기해 두고 있다. 장교의 경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시기인 대위(위관급 전체)와 소령의 계급별 나이정년은 각각 만 45세와 만 43세로 50대 초반까



육군 드론보트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뉴스1

지 복무를 허용하는 외국군에 비해 짧은 편이다. 군간부는 계급별 나이정년을 넘기게 되면 군사복무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으로 전환된다.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인적자원을 군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계급별 나이정년 연장은 문제인 정부 때에도 거론된 적 있었지만, 군인연금 삭감 분위기 속에서 계급별 나이정년을 늘리면 군인연금 수령 대상자가 늘어 재정적 부담이 줄지 않게 된다. 때문에 군인사

법을 개정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군 일각에서는 ‘군의 노령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십년 간 부진해, 부사관 층에서는 벌써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상사의 정원은 2만8000명, 중사의 정원은 4만9000명, 하사의 정원은 4만700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사는 4000명 초과한 3만2000명, 중사는 3000

명 부족한 4만6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한 3만9000명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군이 붙잡으면 서도 현역의 노령화를 줄이는 인적자원 확보 해법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역의 노령화와 군인연금 부담 줄이는 연계법 모색

구원근 초대 육군 동원전력사령관(소장 전역)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역종 전환의 유연성 ▲현·예비역 연계복무 ▲일계급 한정기 아닌, 열린 예비역 진급제 개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구전 사령관은 현역복무와 연계된 예비역 복무의 정상화와 우수 예비군 확보에 힘을 쏟기위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을 주한미군 예비군센터에 견학까지 보냈던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예비역 복무로 전환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예비역으로 전환되면 만60세부터 수령 받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도 줄어든다. 현역보다 근무강도는 떨어지지만, 연계성 있는 복무를 이어갈 수 있기에 군도 숙련자원의 유출의 부담이 줄어든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 ‘코볼의 어머니’로 각각 불리던 미 해군의 하이먼 리코버 대장과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대의 나이에서야 완전히 군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리코버 대장은 63년 동안 복무를 하다가 82세가 되던 1982년에 완전히 퇴역했다. 미 해군의 예비역 장교로 임관한 호퍼 준장은 중령으로 퇴역 후 재복무를 수 차례 거쳤고, 의회의 명예의해 준장으로 진급했다. 미국 정부는 우수 인력의 활용이란 차원에서 유연한 자세를 지켜왔다.

반면, 국군은 낡고 딱딱한 법령의 재 정비에 인색해 우수예비전력을 스스로 도태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의 복무 편성을 크게 줄였다.

국군의 우수인재 확보 대책은 눈앞에 보이는 ‘단기복무장려금 인상’과 ‘외무복무기간단축’과 같은 땀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예비역 군간부들 전반적인 문제인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군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군 안팎의 답답함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현 국회의원)은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청년 선호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1위

작년 응시자 절반이상 청년
男, 전기기사 등 면허형 선호
女, 제빵 등 기능자격증 많아

청년층 가운데 남성은 전기, 산업안전, 지게차 운전 등 ‘면허형’ 국가기술자격증에 주로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등 ‘사무직’ 분야와 제과·제빵, 미용 등 ‘창업’ 가능 자격증을 선호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의 날(9월 17일)을 맞아 19~34세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전체 인원 226만9550명 중 청년층 접수자가 115만754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시 목적은 취업이 5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기 개발 21.8%, 업무 수행능력 향상 9.0% 순이었다.

자격증 종목별로는 기능사(41.6%)와 기사(34.1%)가 많았고, 산업기사(19.9%), 서비스분야(3.93%) 등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시생은 면허형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4만

5793명), 전기기사(4만3593명), 전기산업기사(2만8487명) 등에 많이 응시했다. 여성은 제과기능사(2만7107명), 정보처리기사(2만3238명), 위험물산업기사(7753명) 등이 많았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청년 세대가 과반수 이상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적극 개발하고, 자격 내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택배상자도 일회용 없앤다... 다회용 도입

환경부, 2024년 부터 사업 추진

오는 2024년부터 일회용 택배 상자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다회용 택배 상자(사진)를 제작, 세척·집하시설을 만드는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24년부터 다회용 상자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회용 택배 상자 표준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택배 상자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기업 5곳, 물류기업 3곳과 함께 다회용 택배 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각 유통사가 배송망으로 택배 상자를 회수해 다시 쓰고, 물류기업이 택배 상자를 세척,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한국폐기물협회를 통해 각 유통사에 맞는 택배 상자를 제작하고, 7개월간 택배 배송, 회수 등 실증을 거쳐 경제성, 환경성, 자원순환성 등을 조

사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회용 대신 다회용 택배 상자로 교체시 1회당 평균 74%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량도 다회용 택배 상자가 일회용에 비해 99% 줄었다.

다만, 평균 배송원가는 다회용 택배 상자가 4512원으로 일회용(4343원)보다 169원 높았다.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배송 비용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르는 점에서는 124명(34.8%)만 동의했다. 다회용 택배 상자 미반납 방지를 위해 보증금 납부에도 120명(33.7%)만 찬성했다.

환경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다회용 택배 상자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토종레몬 2개 품종, 국내 첫 품종보호 등록

농진청 “레몬 국산화 한발짝”

추위에 강해 국내 재배가 유리한 국산 레몬 등 2개 품종이 처음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14일 레몬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라몬’과 ‘미니몬’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작물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품종의 품종 개량(육성) 내력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의미다. 품종보호 등록을 하면 품종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보충된 레몬 묘목을 유통함으로써 품종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농진청은 앞서 2015년 국내 1호 레몬 품종 제라몬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호 레몬 미니몬을 개발, 2019년부터 2개 품종을 보급해 왔다. 현재 이들 품종의 재배 면적은 7헥타르(ha)이다.

농진청은 품종을 개발한 뒤 바로 ‘등록’ 단계를 밟았으나 제라몬의 재배심사를 진행한 2016년 1월 기록적인 한파로 나무와 열매가 피해를 받아 재배심사 기간이 연장되다가 올해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해외 품종인 ‘유레카’는 추위에 말라죽은(고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지만, 제라몬의 고사율은 20%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추위에 잘 견디는 내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제라몬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외국 품종인 유레카나 리스본보다 추위에 잘 견디며 재배하기가 유리하다. 또 향기가 진하며 산(신맛) 함량이 8.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한 토종 레몬 품종인 제라몬. 국내서 주로 재배하는 외국 품종인 유레카나 리스본보다 추위에 강하고 향기와 산 함량이 높다. /농촌진흥청

5%로, 다른 품종(유레카 6.63%, 리스본 7.57%)보다 높다. 향기와 산 함량은 레몬의 중요한 품질 평가 항목이다.

미니몬은 화분용 레몬으로 40g 정도의 작은 열매가 열리며 식물 키가 1m 이내로 크지 않아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 한 해 3~4회 꽃이 피므로 꽃과 열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레몬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27ha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4%는 해외 품종이 차지한다. 또 우리나라는 한 해 1만9000톤 가량의 레몬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두 품종 보급과 함께 앞으로는 가시와 종자가 없는 레몬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레몬 국산화에 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